

## 해외 주요 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는 다수의견 초안이 유출되자 행동주의 주주들은 미국 기업들이 근로자들이 낙태 및 재생산 의료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ESG 펀드 관련 신규 공시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say-on-pay)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주주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편, 엑손모빌(ExxonMobil)에서는 행동주의 주주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또 다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01

낙태 관련 미국 연방 대법원 초안이 유출되자 행동주의 주주들은 낙태권과 관련하여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음 [관련 기사](#)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는 다수의견의 초안이 유출되자 행동주의 주주들은 미국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낙태 접근권과 재생산 의료보건 서비스 접근권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명시적으로 설명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사회적 임팩트 펀드인 리아 벤처스(Rhia Ventures)가 제출한 주주제안에 대해 주주들이 강한 지지를 보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음. 리아 벤처스가 제출한 주주제안 중에는,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경우 낙태 접근권에 대한 주(州) 법이 다양각색으로 달라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리테일 기업들에 관련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주주제안이 있음.
- 리아 벤처스는 기업들이 “재생산 관련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주 정책이 제정되거나 제안되는 경우” 발생하는 경영 리스크와 비용을 공개하고, 근로자 손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기업 경영진이 소송과 준법 외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설명할 것을 요구했음.
- 리아 벤처스의 또 다른 결의는 기업들이 “직전 년도에 지출한 정치/선거 후원금이 공표된 기업 가치 및 정책과 합치하는지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했음.

1

- 위 결의는 올해 5월 초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문 유출 시점보다 한참 전인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 시기에 제출되었으나, 위 유출 사건 이후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음.
- 현재까지, 정치자금 지출 관련 결의는 애브비(Abbvie), AT&T, 홈디포(Home Depot) 등의 기업에서 약 30~50%의 찬성표를 받았음. 상기 주 법 리스크와 관련한 주주제안은 향후 몇 주 이내에 로우스(Lowe's)와 TJX 컴퍼니즈(TJX Companies)의 정기주주총회에서 투표에 부쳐질 예정임.
- 주주결의가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은 드문 일이며, 행동주의 투자기업들은 이러한 결과가 기업들이 여성 지원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 02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이름에 ESG가 포함된 펀드들이 관련 주장을 입증하도록 하는 규칙을 제안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는 ESG 목표를 내세운 자문사와 펀드들이 그 주장을 입증하도록 하는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 SEC는 이름에 ESG가 포함된 투자 펀드 및 자문사들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규칙을 3-1로 찬성했음. SEC는, ESG 관련 전략에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금융계는 ESG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품/마케팅이 때로는 투자자들을 오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음.
- 2001년에 채택된 SEC의 현 ‘이름 규칙’에 따르면, 해당 회사가 특정한 산업 또는 지역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으로 등록된 투자회사는 그 자산의 최소 80%를 그 이름에 부합하도록 투자해야 함.
- 이번 SEC 규칙 제안은 위 80% 요건의 범위를 ESG 요소 등 특정한 성격을 보여주는 이름까지 확장한 것으로, 이러한 변경은 “성장” 또는 “가치”와 같은 이름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임.
- 위 변경이 채택될 경우, SEC는 펀드에게 그 이름에 들어간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이름에 부합하는 투자상품을 선택하는지에 대해 공개하도록 강제하게 됨.
- 또한 SEC는 ESG 요소를 고려한다고 주장하는 뮤추얼펀드 및 ETF가 어떤 ESG 요소를 고려하는지,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투자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어떤 기준과 데이터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규칙안을 3-1로 찬성했음.

- SEC는 ESG에 대한 정의는 펀드와 자문사들마다 광범위하게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시 요건이 없을 경우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음.

## 03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ESG 관련 허위진술로 BNY멜론 투자 자문 부문을 고소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BNY멜론(The Bank of New York Mellon Corporation) 투자 부문이 그 뮤추얼펀드의 모든 투자금액이 환경(E), 사회(S) 및 거버넌스(G) 관련 검토를 거친다고 밝혔으나 현실은 언제나 그러한 검토를 거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BNY 멜론을 고소했습니다.

- SEC는 BNY 멜론 투자 자문 부문의 다수의 투자상품이 투자 당시 ESG 검토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고소한 것에 대해 15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음. BNY는 위 고소에 대해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음.
- SEC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BNY 멜론은 다양한 발표문을 통해 BNY 멜론 뮤추얼펀드의 모든 투자는 ESG 품질 검토 절차를 거치고 있음을 시사했음. 그러나 BNY 멜론의 뮤추얼펀드의 투자 185건 중 67건의 경우, 투자 당시였던 2019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관련 점수가 부재했음.
- BNY 멜론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BNY 멜론이 컴플라이언스와 규제 관련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투자자들과 정확하고 완전한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 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혔음.
- 미국 로펌 Wiley Rein LLP의 케빈 머렌도프(Kevin Muhlendorf) 파트너 변호사는 ESG 투자 기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올해 더 많은 집행 조치가 예상된다고 지적함.

## 04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항의가 거센 가운데, 공공 금융기관 신용평가기관에 ESG 요소들이 제외되는 경향이 있었음 [관련 보고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신용평가기관이 ESG 관련 요소를 신용평가 요소로 포함하는 방침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치(Fitch Ratings)에 따르면, 미국 공공 금융기관 신용평가기관 중 극히 일부만이 ESG 관련 요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피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틸리티 관련 공기업, 지방자치 서비스 및 지방 정부들에 대한 신용평가기관 중 7%만이 ESG 이슈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포함했음.
- 모든 발행사 신용평가기관 중 3%가 거버넌스를 중위~고위 관련 요소로 언급하여, 거버넌스(G)가 가장 중요한 ESG 요소로 나타났음.
- 피치 연구원들은 “임명직 이사회와 선출직 임원들의 부당한 개입 없는 거버넌스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은 좋은 실적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지적하며, “거버넌스 요소들은 공공 서비스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환경(E)과 사회(S) 이슈들에 대한 대응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용평가기관이 고위 관련성을 가진 요소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말했음.
- 한편 피치에 따르면 신용평가기관 중 2%가 사회(S)와 환경(E) 관련 요소들을 중위~고위 관련 요소로 언급했음. 피치 연구원들은 “ESG 요소가 발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ESG 정보가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며, “이와 같이, 피치는 [미국 공공 금융] 발행사들에 대해 특히 기후변화 등과 관련하여 주주들의 ESG 관련 정보 공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말했음.
- 미 공화당 주 의원들은 미국 금융기관들이 신용 리스크 요소들을 분석할 때 ESG 지표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ESG 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음.

05

## ISS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원 보수 주주투표(say-on-pay)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투자자들이 줄어들고 있음

ISS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자회사인 ICS (ISS Corporate Solution)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1에 임원 보수 주주투표가 의무화된 이래 S&P 500대 기업에서 임원 보수 관련 주주투표(say-on-pay)에 대해 찬성한 주주들의 비율의 중간값(median)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 ICS에 따르면 미국 주총 시즌이 무르익어가는 5월 9일까지,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제안에 주주들이 찬성표를 던진 비율의 중간값은 92.2%였음. 위 수치는 2021년 92.7%와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94.1%보다 낮았음.
- ICS는 위 사안에 대한 주주 지지의 하락은 임원 보수의 인상과 비례한다고 지적했음. S&P 500대 기업의 CEO 보수의 중간값은 2020년 이래 9% 인상되어 2022년 5월 9일 기준 1,440만 달러를 기록했음.
- ICS의 브라이언 존슨(Brian Johnson)은 “이 결과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CEO 보수와 그러한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들의 지지 사이의 간극이 커져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라고 지적하며, “현재와 같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주주들은 기업 실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높은 임원 보수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확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라고 말했음.
- 주주들은 현재 여러 기업과 행동주의 주주들이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하여 제출한 주주제안에 투표할 예정임. 다음 몇 주 동안 아마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맥도날드 등의 기업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를 포함한 여러 결의에 대해 투표할 예정임.

06

## 미국 상원의원들이 다양성, 암호화폐, 사이버안보 등과 관련하여 증권거래위원회 위원 후보들을 압박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 후보들은 다양성과 기타 사안들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임명될 경우 어떠한 정책 관련 입장을 견지할 지에 대해 많은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들은 각각 민주당 소속 SEC 위원 후보와 공화당 소속 SEC 위원후보를 총원하기 위해 지명된 하이메 E. 리자라가(Jaime E. Lizárraga)와 마크 토시로 우에다에 대한 인준 청문회에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질문하며 후보들을 압박했음.
-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Bob Menendez) 상원의원은 리자라가 후보와 우에다 후보가 인준될 경우, 자산운용업계에서 다양성을 증진하라는 SEC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SEC에서 투표에 부치도록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음. 위 권고는 자산운용기업의 “경영진 및 직원들”의 성별다양성과 인종다양성을 의무적으로 공개할 것을 제안했음.

5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수석 보좌관이었던 리자라가 후보는, 인준될 경우 다양성 관련 이슈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위원회 소속 변호사였던 우에다 후보는 SEC 자문 위원회의 권고를 “매우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위 사안은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이를 어젠다로 삼을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 소속 잭 리드 상원의원은 위 두 후보가 기업 이사회에 사이버안보 전문가를 두고 있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SEC 규칙 제안을 지지하는지 여부와, 위 규칙의 조속한 이행을 지지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했음. 리자라가 후보는 SEC와 SEC 규제 대상 기업들이 원칙적으로 사이버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우에다 후보는 현재 공공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는 SEC 규칙과 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사이버안보를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SEC는 과거에 여러 번 사이버 공격을 받은 바, 사이버안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청문회에서 상원의원들은 위 후보들에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SEC의 기후변화 공시 규칙안과 같은 ESG 관련 사안들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으며, 리자라가와 우에다 후보 역시 청문회에서 자발적으로 위 이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음.

## 기타뉴스

- 미국 석유기업인 엑슨모빌(ExxonMobil)의 주주들은 엑슨모빌이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로부터 신재생에너지로 이행되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인해 회사 재정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는 조치에 찬성표를 던졌음. 위 조치는 엑슨모빌이 감사필 보고서를 발간하여 2050년까지 넷제로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모델링이 엑슨모빌 재무제표의 기초를 이루는 “추정 값, 비용, 수치 및 가치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개괄하도록 요구했음. 위 결의는 52%의 찬성표를 받았음. 기후 관련 운동가들은 작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엔진넘버원(Engine No.1)이 엑슨모빌 이사진 3명을 교체하는 데 성공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엑슨모빌에서 또 다른 성공을 이루었음.

## 국내 주요 뉴스

이번 주 국내 뉴스는 그린워싱 방지 및 친환경 제품의 확산을 위해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강화한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관련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드립니다.

01

환경부가 친환경 제품의 시장 수요가 높은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6개 품목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한 기준의 프리미엄 인증을 확대하는 등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보도 자료](#)

- 환경부는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5월 31일부터 행정예고함.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6개 품목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프리미엄 인증요건을 강화함.
- 세부적으로는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는 세계 수준의 에너지 절감, 5년간 핵심부품 공급을 보장하고 ‘제품 덮개’에 재생 합성수지 사용기준 등을 만족해야 프리미엄 인증을 받게 됨. 주방용 세제, 세탁용 세제, 샴푸·린스 및 바디워시는 첨가되는 화학물질을 독일의 친환경 표지 제도인 ‘블루엔젤’ 보다 엄격하게 설정하여 환경안전성을 담보함. 특히 프리미엄 인증은 100% 생분해 물질로 제조하도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 의류의 경우도 첨가되는 유해물질 함량을 유럽의 섬유안전성 유해물질 시험 제도인 ‘오코텍스’ 수준으로 엄격하게 정하고, 프리미엄 인증은 재활용 폴리에스터 원사를 50% 이상 사용해야 함. 한편,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통컵(텀블러)와 다회용기 대여서비스의 인증 기술을 신설하고, 형광램프 등은 인증 대상에서 폐지하는 등 품목을 대폭 재조정할 예정임.
- 한편, 환경부는 향후 프리미엄 인증을 생활밀착형 제품 전체로 확대하고 일반 인증기준도 시중 제품 중 상위 30%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02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7일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제정/개정을 권고했음 [보도 자료](#)

- 국가인권위는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과 인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은 인공지능의 도입·운영·결정 과정에서 의견제시나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인공지능에 의해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한 경우에도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미흡한 상황이라 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힘. 유엔은 인공지능 활용 시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수 차례 권고한 바 있음.
- 인권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는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 ▲투명성과 설명 의무 ▲자기결정권의 보장 ▲차별금지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시행 ▲위험도 등급 및 관련 법·제도 등 내용이 담김.

03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현행 10억 원인 과징금 상한선을 대폭 높여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음 [관련 기사](#)

- 지난 26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하고,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해 실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액수를 늘려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현행 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정률 과징금은 ‘하도급 대금의 2배×위반금액 비율×부과 기준율’에 따라 산정하지만 근거가 되는 위반금액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10억 원 이하 범위에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함. 2016년 이후 발생한 사건 모두 정액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 이는 대기업의 기술 유용행위가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임.
- 공정거래법상 정액 과징금 상한액이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2배 높아진 만큼, 하도급법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상향이 예상되며, 하도급법상 과징금 산정을 위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도 개선할 예정임.



## ESG 센터 주요 소식

- [기고]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NCP(환경일보, 2022. 5. 16.)
- 법무법인 지평 · 리걸 500, 26일 ‘위기관리 및 ESG 경영’ 웨비나(법률신문, 2022. 5. 16.)
- ‘한국판 BRT’ 출범, ESG업계 기대와 우려 교차(데일리임팩트, 2022. 5. 17.)
- 법무법인 지평,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확장 이전(조선비즈, 2022. 5. 19.)
- [기고] [법률] 건설 분야 탄소중립의 길 (1)- 정부 시나리오와 전망(대한전문건설신문, 2022. 5. 23.)
- ‘ESG경영 성패 결정’ 뜨거운 논쟁의 장 열려(데일리임팩트, 2022. 5. 27.)
- 허위광고 · 부적절 라벨...기업들, ‘가짜 친환경’ 규제 · 소송 대응 나선다(아주경제, 2022. 5. 29.)
- 인플루언서도 경쟁사도 ‘감시’...“ESG 욕심에 그린워싱했다간 분쟁”(한국경제, 2022. 5. 29.)

### 법무법인(유) 지평 ESG센터/ FiscalNote Korea Contact

민창욱 파트너변호사	T. 02-6200-1841	E. cwmin@jipyong.com
정영일 경영연구그룹 그룹장	T. 02-6200-1803	E. yichoung@jipyong.com
지현영 변호사	T. 02-6200-1913	E. hyjee@jipyong.com
손민경 FiscalNote Korea 대표	T. 010-3809-1592	E. liz.sohn@fiscalnote.com